

종합

정부 전월세 대책 광주·전남엔 '헛방'

물량 부족 해소 못하고 대출 확대로 되레 전세난 가중

'1·13 전월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악화되자 정부가 11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1 전월세 후속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난의 원인이 수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대란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 풀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지역의 시장 반응은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수도권만의 대책"이라며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2·11대책의 핵심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주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현재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또 다른 핵심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이다.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에 분양할 주택을 임대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 50% 감면 및 구입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들에게 자금지원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빚을 늘려 대응하려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대출 확대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폭증시켜 되레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당장의 서민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지원 차원의 대책은 필요악"이라고 평가했다.

전세난의 기저에 매매를 꺼리는 수요심리가 깔려있고,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공급 불

균형이 문제인데 세제혜택 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수의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처장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가 전제로 돌아서고, 건설경기 악화로 공급이 줄면서 공급 불균형을 초래한 데 있다"며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대책, 즉 DTL(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지역현실을 외면한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전세자금 지원 확대나 미분양 주택의 활용 방안 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되레 매입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지난해 사회문제화됐던 매입임대사업자의 악의적 부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공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소규모 주택을 매입해 전세 물량을 늘리

고, 말뿐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확대 로드맵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무성 '전월세 대책 미흡' 비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1일 전월세값 급등과 관련, "지난해에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정부 답변과 시장상황은 과리가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당정회의'에서 "(전·월세 급등은) 이번 이사회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 이사회에도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인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만약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진로 험란한 F1대회, 정부가 지원 나서야

영암 F1(포물러인)대회의 진로가 험난하다. F1 경주장의 핵심 활용방안으로 마련했던 F3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고, F1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경영조 전 대표의 해임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원년대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경기장 추가 공사비 308억 원의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급년 F1 대회 운영비로 200억 원만 책정해 빚을 내서 대회를 치뤄야 할 형편이다.

F3의 무산은 조직위원회 역할을 하는 영국 MRC가 지난 대회 취소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과 경영조 전 대표 해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국가 신뢰도 추락 및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전남도가 F1 대회 외에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는 상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했

으나 F3의 무산에 따라 경주장 사후 활용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또 급년 F1 대회를 위해서는 경주장 추가 공사비 1025억 원, 대회 운영비 780억 원 등 1805억 원이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은 국비 200억 원과 전남도 자체 예산 475억 원에 불과해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성공 개최는 요원한 실정이다.

F1은 연간 400만 명의 관중에, 6억 명의 시청자가 경기를 지켜보는 세계 대형 스포츠 이벤트라는 점에서 차질을 빚을 경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와 운영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전남도와 카보 역시 소송에 철저히 대비하되, F3 유치 방안도 다시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회에서 낙제점으로 지적된 숙박과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광주시의회가 민주당 대의기관인가

최근 광주시의회 행태를 보면 광주 시민의 대의기관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의기관인지 헷갈린다. 전국 최대 이슈이자 광주시 주요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서 시민의 의사나 지역발전보다는 중앙당 지도부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구성한 '과확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참여부터 소극적이다. 지난 8일 서울 국회의원에서 열린 '과확벨트 호남권 유치 국회포럼'에 시의회에서는 부의장 1명만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개최된 '과확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창립 총회 및 호남권 유치 설명회에도 시의회는 의장단은 물론 일반 의원조차 대부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과확벨트 유

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반해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좌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런 삼심 밖의 태도는 과확벨트의 총천연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지역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숨을 쥐고 있는 당 지도부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6명 가운데 20명이 민주당 소속인 걸 생각하면 이런 지적이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닐 듯싶다.

이런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들을 지역 일꾼으로 믿고 뽑아준 시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광주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 역할을 포기하고 중앙당 대변 노릇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재단 공식 활동

설립추진위 첫 회의

광주시는 1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여성재단 설립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올 상반기 중 재단 출범을 목표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7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설립준비단에서 논의해 마련한 재단 정관과 조직·인사규정, 임원선출 절차 등의 주요안건을 토의·추진했다. 위원장에는 호남대 박해자(56) 교수가 선출됐다.

추진위원회는 3월 재단 발기인 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 재단 정관과 재단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민간전문가 20명이 참여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시민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설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설립추진위원회는 1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7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는 이날 호남대 박해자(56)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회 폭력' 강기정 의원

향소 기각 벌금 5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1일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기정(47) 의원에 대한 향소심에서 강 의원의 향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통고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음에도 국회의원과 취재진이 있는 자리에서 폭을 했고 한나라당 보좌진을 폭행한 것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생긴 일로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항의할 수 없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두달 연속 인상 부담...기준금리 동결

김중수 한은 총재, 2.75% 유지... 이르면 내달 인상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해 이르면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달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국내 경기는 수출과 내수가 다 같이 늘어나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구제역, 이집트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김 총재는 "이런 요인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돼 충분히 상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면 경기 상승세의 발목을 잡고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 동결이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가 아니었다"고 말해 일부 위원은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재는 "앞으로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 압력 증대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4%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1월 중 인플레

기대심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보다 물가 불안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 정상화와 관련, "헛방을 디딜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로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 경제에서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가장 주의깊게 보겠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4.5%)보다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절대 안돼"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1일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격정하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당국에 당의 강력 한 입장을 전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

한 만큼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도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반영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당장 없애면 근로자 충격이 매우 크므로 신중히 다루야 할 부분"이라며 일몰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석선장 팔·다리 수술 무사히 마쳐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 등으로부터 총상을 입은 삼호주류리호 석해군(58) 선장이 11일 오전 5시간여 동안에 걸쳐 골절된 팔과 다리 등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신준한 아주대병원 제2진료부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석 선장의 폐 기 능이 호전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15분부터 수술에 따라 이날 오전 8시15분부터 팔과 다리, 복부 등에 대한 수술을 진행해 오후 1시20분 무사히 끝마쳤다"며 "그러나 중증환자에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달 30일 과사조직과 고름 등을 제거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서 절개한 뒤 개방된 상태로 있던 복부 3곳을 봉합하는 복부재건수술이 우선 시행됐다.

또 총상으로 골절된 왼팔 개방성 골절부위와 오른쪽 무릎 위 넓적다리 부근의 개방성 골절과 왼쪽 엉덩이 부근 넓적다리뼈 개방성 골절에 대한 수술 순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이게 도대체 언제적 방식이냐?!

전남도, 오늘부터 소 구제역 2차 접종

54만마리 대상 15일 완료

전남도는 12일부터 도내 소 54만8000마리에 대한 2차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정부로부터 59만마리 분량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공급받은 뒤 도내 모든 한우·젖소 등에 대한 접종에 들어가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내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가축은 소 54만 8000마리, 돼지 91만2000마리 등 모두 146만마리로,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은 지난 6일 완료됐으며 2차 접종은 경우 도내 돼지 종돈장(10만 8000마리)에 대해서 지난 10일 완료한 상태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